
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보 도 자 료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'21.3.12.(금)조간	배포	'21.3.11(목)	
책 임 자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담 당 자	이지현 사무관(02-2100-2993)		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광 우(02-3145-6771)		박종춘 팀 장(02-3145-6772) 이건필 팀 장(02-3145-6773)		

제 목 :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

－ 해산·합병 등 인가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증액 등 저축은행에 대한 일부 규제를 합리화 합니다.－

< 개정안 주요 내용 >

- ① 저축은행의 해산·합병,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과 금융위에 대한 신고면제 사항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.
- ② 저축은행의 여신규모 증가 등을 반영하여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% 증액하였습니다.
- ③ 저축은행이 자산가격의 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.

1. 추진 배경

-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('21.7.27시행)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해산·합병 심사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
- '20.11월 발표된 대형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, 자산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등 규제합리화를 위해 「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.

2.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

① 해산·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 마련 (§ 6의4)

- **(현행)** 저축은행 해산·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(7.27일 시행)되었습니다.

* 법률개정 전에는 해산·합병 등 심사기준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(§15, §16 등)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음

- **(개선)**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·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,
 -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운영하던 ‘자본금 감소’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하여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
② 신고 면제사유를 구체화 (§ 7의6)

- **(현행)** 개별저축은행 ①정관, ②업무방법서 변경의 경우 금융위 신고수리가 필요하나 ‘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’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.

* 현재 감독규정(§19)에서 ‘중앙회 회장이 정한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라 저축은행이 각각 변경하는 경우’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

- **(개선)** 기존 감독규정(§ 19)상의 예외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,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은 감독규정에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.

③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(§ 9)

- **(현행)**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그간 자기자본의 20% 이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 기준^{*}을 적용하였습니다.

* Min [자기자본 20%, 개인 8억원 · 개인사업자 50억원 · 법인 100억원]

- **(개선)** 저축은행 여신규모 증가 등을 감안하여 자산 1조원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20% 증액하였습니다. (개인사업자 60억원 · 법인 120억원)

*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'16년 일부 증액(6억원→8억원, 33%증액)되었다는 점을 감안, 이번 개선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한하여 증액

④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부여 (§ 11의2)



- **(현행)**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(자기자본)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.

* 「보험업법」(§107)의 경우 한도초과후 1년 이내 처분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

- **(개선)**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.

3. 향후 계획

- 입법예고('21.3.12.~'21.4.22.) 및 관계부처 협의, 규제위 ·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개정안 시행일 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지적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</p>	<p>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</p>	 <p>법률관리자센터</p>
--	---	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